

企劃論文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

김 경 희*

I. 서론	IV. 결론
II. 민주에서 공화로	<참고문헌>
III. 공화에서 민주공화로: 근세 초 르네상스 기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민주공화 주의	<국문요약>

I. 서론

이 글은 서구에서 진행되었던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근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은 ‘민주화 이후’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찰에서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70~80년대는 독재정부와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지고의 가치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희망이자 이상이였다. 그런데 87년 이후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더 이상 지고의 가치일 수 없었고, 그 또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발전시켜가야 하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민주주의는 보완되어야 할 무엇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었고, 그 외중에 나타난 것이 공화주의라는 개념이었다.¹⁾ 그런데 대한민국의

* 경희대학교 NGO 국제연구소 연구교수, 서양정치사상 전공(tugend87@hanmail.net).

1) 그 대표적인 논자들을 들자면 최장집과 송호근을 들 수 있다. 최장집은 그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

헌법 제1조 1항에도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보듯이 ‘공화’는 우리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되물어 보았을 때는 말문을 막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라는 개념이다. 매일 신문지상에서 읽었을 수도 있는 이 ‘공화’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개념이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오고, 그것이 또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 수용, 각인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공화의 경험이 아직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실제 역사상 일어났었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개념화해서 내재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개념화, 내재화 한 서구의 경험과 그 이론화의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고대에서 근대초기 르네상스 시기까지의 서구 민주공화주의 이념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테네 민주정의 과도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혼합정의 이론을 공화민주주의로 부르고, 그 혼합정론이 고대 로마에 수용되어 로마 공화정을 분석하면서 그것에 기반한 이론으로서 기능할 때는 공화주의로 부르려고 한다. 나아가 이 공화주의는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부활한 공화국과 거기서 태동한 공화주의를 부를 때도 적용될 것이다.

아테네가 제국화되고 하층민들의 지배에 의한 과격한 민주주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실정(失政)으로 인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많은 아테네 지식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우중의 지배로 비판하였고, 귀족 혹은 엘리트들과 권력을 분점할 것을 주장한다. 권력의 독점 속에서 나오는 극단화로의 경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혼합정의 주장은 이 때 역사상 처음 나타나게 된다. 균형과 조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극단화 경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을 공화민주주의로 부르려고 한다. 한편 로마의 공화정은 왕정의 폐지 후에 귀족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인민들과 조화를 이루는 정체를 마련하게 된다. 집정관, 원로원, 민회 등의 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를 이루게

주의』(후마니타스, 2002)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드러낸 민주주의의 왜곡현상을 지적한다. 분단이데올로기와 보수 정당체계 속에서 왜곡된 정당구조와 정치구조는 시민들의 참여와 이익관계 대변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공화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송호근은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21세기 북스, 2005)에서 민주화 이후 각 사회계층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법질서와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과잉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화주의에 주의를 돌려야 함을 주장한다.

되는 것이다. 인민의 직접 참여 혹은 지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도 혹은 대표들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였다. 다시 말해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공화정은 귀족과 인민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의 부침 속에서 성장,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가 우세했을 때는 귀족주의적 공화정, 후자가 우세했을 때는 민주적 공화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력균형과 권력분점에 대한 관점은 귀족과 인민사이의 끝없는 분란을 겪었던 근세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도시 공화국에서 살았던 마키아벨리에게서 나타나며, 인민에 중심을 두어 공화정을 구성하고자 하는 민주공화주의 이론을 태동시키게 된다.

요약하자면 공화민주주의가 공화, 즉, 공동체 구성세력의 권력분점에 강조를 둔 민주제를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민주공화주의는 인민에 중심을 둔 공화주의로서 인민 중심의 혼합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민주주의와 민주공화주의는 이렇게 권력독점을 지양하며, 권력분점과 혼합정을 주장하는 등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 경험과, 귀족과 인민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²⁾ 이 이론들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가 너

2) 현재 한국학계에서도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 속에서 ‘민주공화주의’나 ‘공화민주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들은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가리키거나 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비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6권 제2호(2003), 93~116쪽; 정원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하며』, 『철학』, 제71집 여름(2002), 171~196쪽. 반면, 이 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핵심개념인 ‘공화민주주의’와 ‘민주공화주의’는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맞춘 시론적 개념이다. 현대 민주주의 개념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로마의 공화주의 나아가 프랑스 혁명의 천부인권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 등이 혼합된 복잡한 개념이다. 그 복잡한 실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원형적인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념이 처음 나타날 당시의 정치사적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처럼 역사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정치투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개념들에 있어서는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화민주주의’는 민주정의 급진화 과정을 경험한 아테네인들이 권력독점에서 나올 수 있는 과도화와 몰락의 경향을 제어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며, ‘민주공화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공화정에서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귀족들의 힘이 압도적이 될 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인민이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공동체는 다양한 계층들의 세력관계 속에서 그 헌정체제를 수립하기에 공화주의 혹은 민주주의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구체적인 세력관계

무 강해져 지배와 독점의 경향이 나타날 때는 공화로 균형을 잡으려 하고, 권력을 귀족층 및 엘리트들이 과점 혹은 독점하려는 경향 속에서는 민주를 강조하여 공화의 무게 중심을 잡으려는—정치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중용의 역사적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II. 민주에서 공화로

1. 고대 아테네의 공화민주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등장하는 폴리티(polity) 개념은 아테네 민주정의 과도화/극단화 경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지배자의 수—일인 소수, 그리고 다수—와 그들이 누구를 위해 지배를 하는가—사이 혹은 공익—에 따라 좋은 정체—군주정, 귀족정, 폴리티—와 나쁜 정체—폭군정, 과두정 그리고 민주정—로 나누면서 그는 현실에서 빈자와 부자의 혼합정체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혼합정체의 모델은 아테네 민주정의 급진화와 그에 따른 공동체의 혼란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빈자층의 전일적 지배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고 부자들에게도 정치의 공간을 주어 균형 있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핵심세력을 혼합시키고, 중간층에 의지해 민주정의 급진화로의 경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화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아테네의 민주정이 제국을 거치면서 급진화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혼합정의 이념 속에서 나타나는 공화민주주의의 정신을 살펴볼 것이다.³⁾

를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주공화주의’와 ‘공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 3)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변화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해서는 김경희,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 이소노미아(Isonomia)로 아테네 민주정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2006), 5~25 쪽 참조 또한 플라톤부터 마키아벨리에 이르는 혼합정론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이수석, 「혼합정체의 정치사상사적 연구: 고대 혼합정체론의 전개와 부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참조

아테네 민주정은 솔론(Solon)과 클레이스테네스(Kleisthenes)의 개혁을 거치면서 민중의 권익과 평등을 향상시켰다. 솔론은 민중들을 노예화했던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 주었고, 재산에 따라 시민을 4계층화함으로써⁴⁾ 기존의 혈연이나 가문 등에 따라 차별화되었던 공직진출권을 재산이라는 객관적 조건으로 바꾸어버렸다.⁵⁾ 부자들의 과도해진 권력을 제어하고자 했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가 행한 개혁의 핵심은 행정구역의 개편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혈연, 지연부족 중심의 인민구성을 폴리스를 구성하는 지역구, 소부족, 부족 중심의 공적 연대감을 지닌 시민들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에 기반하여 각 구역 단위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은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에 일조를 하였다.⁶⁾

그런데 이러한 민주정의 발전에 결정적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페르시아와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특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기고 난 후, 그리스의 해게모니를 쥐고 해상제국으로 성장한 아테네는 해군을 주력군으로 가지게 되었다. 중산층 농민에 기반한 제한된 수의 중무장보병 대신 하층시민들인 테테스를 수병으로 충원하게 됨으로써 아테네의 시민층은 급격하게 확장되게 된다. 제국의 해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층으로 수용된 하층시민들은 제국으로 들어오는 공물과 그것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제국이 그들을 먹여 살렸기에 그들은 아테네 정치의 핵심기관인 민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테네 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민회를 채운 이들은 예전의 중산층이 더 이상 아니었다. 그들은 군복무 및 전쟁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으로 연명하는 하층시민이었다. 경제적 자립으로 인해 정치영역에서 공동체만을 위해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4) 이 4계층은 500메덤노이, 기사, 제우기타이, 테테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저)/최자영(역), 『아테네 정치제도사』, 아리스토텔레스·크세노폰(외저)/최자영·최혜영(역), 『고대 그리스정치사 사료』(도서출판 신서원, 2002), 57쪽 참조

5) 솔론의 개혁에 대해서는 Forrest, W. G.(저)/김봉철(역),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도서출판 한울, 2001); Martin, Thomas R.(저)/이종인(역),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람기획, 2003); Raaflaub, K., "Die Anfänge des politischen Denkens bei den Griechen," I. Fetscher & H. Münkler(hrsg), *Pipers Handbuch der politischen Ideen*. Bd. 1.(München: Piper, 1988), pp. 234~239 참조

6)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 대해서는 양병우, 『아테네 민주정치사』(서울대 출판부, 1976), 6~27쪽; Martin, 앞의 책, 141~143쪽 참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중무장보병 시민층과는 달리 제국으로 들어오는 공물과 거기서 지출되는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하층시민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추구를 위해 정치를 운영했다. 그것은 무모한 전쟁욕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보이는 우중(愚衆), 즉, 데모스(demos)의 지배(kratia)로서 민주정(demokratia)에 대한 폄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평등을 그 핵심가치로 가지고 있다.7) “동등한 시민들이 모인 곳이면 그 어디나 폴리스”8)라는 언명에서 드러나듯, 평등한 시민들은 민회와 인민법정을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추첨과 엄격한 임기제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들은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실제로 권력을 소유한 참여하는 시민들이었던 것이다.9) 따라서 아테네의 정치공동체는 시민들의 단일성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10) 이렇게 단일화된 시민단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특권으로 여겨 외부인에게 제한하게 되며,11) 독점과 지배의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체론을 주장한다. 그의 혼합정체론은 민주정과 과두정을 혼합하는 것으로, 빈자와 부자간의 융합을 꾀한 것이다.12)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분열에 의한 정치공동체의 혼란에 주목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적인 방법과 과두제적인 방법, 예컨대 민회나 법정에 참여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나 그렇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결석(闕席) 벌금 혹은 추첨과 선거 등의 방법을 혼합하려 한다. 그것은 시민층 상층의 정치 충원을 독려하는 것으로, 정치적 권리의 차별화를 통하거나 하층민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수당지급과 추첨—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다시 말해 민주정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상층시민들을 참여시

7) 민주정의 핵심가치인 동등한 권리 (isonomia), 동등한 발언권 (isegoria), 동등한 지배권 (isokratia)은 모두 평등 (isotes)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다.

8)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Chicago Uni. Press, 1973), p. 198.

9) Aristoteles(지)/나종일(역), 『정치학』(삼성출판사, 1982), 242쪽 참조.

10) Meyer, E., “Vom griechischen und römischen Staatsgedanken,” Richard Klein(hrsg), *Das Staatsgedanken der Römer*(Darmstadt: WBG, 1966), p. 73.

11) 페리클레스에 의해 제안된 이 법은 시민권을 부모 모두 아테네 사람인 이들에게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2002), 77쪽 참조.

12) Arisoteles, 앞의 책 (1982), 171~172쪽 참조.

켜 민주정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공동체 각 층의 혼합 속에서 ‘민주정’의 극단화 경향을 제어하려고 했던 혼합정 이론은 조화와 균형 즉, ‘공화’를 통한 민주정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화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 고대 로마의 공화주의: 폴리비오스(Polybios)와 키케로(Cicero)

1) 폴리비오스의 혼합정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론에는 상이한 계층간의 극단적 대립과 배제의 경향 속에서 혼란과 몰락을 경험한 아테네인들의 경험이 녹아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계층간의 통합과 조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반면 로마공화정은 현실의 성공한 정치체제였고, 그것을 그리스 출신의 역사가인 폴리비오스는 그의 『역사』에서 혼합정론을 빌려 성공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아테네의 혼합정론의 영향을 받아 순수정체의 과격화의 경향과 그로 인한 타락을 언급하며, 로마의 성공요인을 권력의 독점을 견제한 것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어느 한 계층이 과도한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혼합정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기에 로마는 단시일 내에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폴리비오스는 이전의 혼합정론자들과는 달리 제도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언급한다. 다시 말해 로마에서는 사회각층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그것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독점을 막는 혼합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폴리비오스의 정체론의 핵심은 순환론과 혼합정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순수정체는 그 초기의 좋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타락하기에 정치체제는 끊임없는 변동과 부침을 겪게 된다는 것이 순환론의 핵심이고,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나오는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혼합정체라는 것이다.

우선 순환론에 대해 보자면, 순수정체가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부침의 과정을 겪게 되는 이유는 그 정체에 내재하는 지배자층의 권력독점 경향 때문이다.

한 종류의 단순한 원리에만 의존하는 모든 정부 형태는 그것이 지닌 특유의 본성과 악으로 쉽게 변질되어 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점을 성

찰하였다…왕정 내에는 절대주의라는 악이 있고, 귀족정 내에는 소수 독재라는 악이 있고, 민주정 내에는 무법적인 만행과 폭력이라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Polybios 6. 10).¹³⁾

이 독점의 경향을 제한하는 것이 혼합정의 역할이다. 세 가지 좋은 순수정체인 군주제, 귀족제 그리고 민주제의 혼합이 혼합정론의 핵심이다¹⁴⁾ 각각의 정체를 구현한 제도들로서 집정관, 원로원 그리고 민회를 언급하면서 이것들로 인해 로마 정체는 혼합정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로마 정체는 이들의 권력분담과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가에 따라 로마정체는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말한다. 집정관을 보면 군주정이고, 원로원을 보면 귀족정이고, 민회를 보면 로마는 민주정이라는 것이다.¹⁵⁾ 이러한 혼합정은 국내정치적으로는 제도와 기구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안정을 가져오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협력과 조화를 통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힘을 산출해 낸다고 그는 보았다.

상호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이런 세 구성요소들은 모든 비상 시국에서는 일치단결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정체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구조로 인해 그가 결정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되고 그들의 성공으로 부와 그 결과를 향유하여, 오만으로 흐르는 경우, 이 정체는 그 자체에 이런 폐단을 바로잡을 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세 부분 중 하나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 허용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 할 때, 어느 것도 독재적이 될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견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Polybios, 6, 18).¹⁶⁾

로마가 단기간에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

13) M. I. 핀리(위음)/이용찬·김쾌상(역), 『그리스의 역사가들』(대원사, 1991), 480~481쪽.

14) 폴리비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6가지 정체유형을 받아들이지만, 민주정은 그와는 달리 좋은 정체로 바라본다. 인민들의 사적 지배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난하는 민주정을 폴리비오스는 폭민정(Ochlocracy)으로 부른다.

15) Polybios, 6, 11, M. I. 핀리, 앞의 책 (1991), 482쪽 참조.

16) 위의 책, 487쪽 참조.

있던 것은 서로 다른 정체원리와 기능을 담당한 제도를 가지고 그것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내치(內治)에서는 조화와 통합을 이루고, 외치(外治)에서는 힘의 응집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혼합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키케로의 공화주의

폴리비오스에게는 각 부분간의 관계와 그들의 협력이 중요하였다.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시민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권의 규정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혼합정론에서 의도했던 사회 세력들—부자 대 빈자 혹은 귀족 대 인민—의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고 혼합하려는 노력이 그들을 대변하는 각 제도들 간의 힘의 균형으로 대체되었다. 누구 하나가, 어느 한 계층이 지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모두가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민주’ 대신에 ‘공화’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공화정의 몰락기를 살았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키케로는 공화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화국은 인민의 일들이다. 그러나 인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일군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¹⁷⁾

공동의 정의와 법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정치공동체는 그러나 순수정체로는 안정적일 수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세 가지 단순정체는 쉽게 그 성격과 반대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데 “왕에게서 참주가 나오고, 옵티마테스에게서 과두들이 나오며, 인민에게서 폭도와 무정부 상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불안정성은 혼합되고 상호 균형을 취하는 정체의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혼합정이며, 키케로에게는 로마가 역사상 존재

17) “res publica res populi, populus autem non omnis hominum coetus quoquo modo congregatus, sed coetus multitudinis iuris consensu et utilitatis communione sociatus.” De re publica, 1, 25, 39; Cicero, *Vom Gemeinwesen*. Karl Büchner(über.&hrsg.)(Stuttgart: Reclam, 1997), p. 131.

18) De re publica, 1, 45, 69. 허승일, 『로마 공화정 연구』(서울대 출판부, 1995), 292쪽에서 재인용

했던 최상의 혼합정인 것이다.

이러한 혼합정으로서 로마의 공화정은 세 가지 정체요소의 장점을 조화시킨 체제였다. 군주제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시키기 힘들 것이며, 귀족제에서는 광범위한 인민들이 그들의 자유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반면 민주제에서는 평등이 지배하나 그러한 보편적 평등은 오히려 능력과 권위의 차를 부정하는 불평등일 것이다(De re publica 1, 27, 43). 그러나 반대로 민주제는 인민들에 의해, 동물들에게조차도 소중한 자유(libertas)를 귀족제는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들에 의한 지혜(consilium)를, 그리고 군주제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대하듯 시민들을 사랑하는 군주의 대승적 사랑(caritas)을 가지고 있다(De re publica 1, 35, 54).¹⁹⁾ 이 장점들을 조화시키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공화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정은 역으로 앞서 말했던 3가지 순수정체의 단점들, 즉, 군주제와 귀족제에서 나타나는 인민들의 자유의 부족, 민주제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평등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3가지 순수정체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로마의 공화정은 행정관들의 권력(potestas)과 귀족들의 권위(auctoritas) 그리고 인민들의 충분한 자유(libertas), 이 세 가지의 조화로운 분할과 균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속에서만 안정이 보장되는 정체였던 것이다.²⁰⁾

그런데 키케로가 바라보는 혼합정의 핵심은 그것이 ‘공화’를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체제라는 데에 있다. 앞에서 본 그의 공화국에 대한 정의에서 보이듯 공화국의 핵심은 res publica이며, 그 개념에는 인민의 이해관계 혹은 이익이 반드시 인민에 의해서 인지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단지 그것이 인지되어야 한다는 필연성만이 있을 뿐이다.²¹⁾ 다시 말해 res publica는 어떤 국가형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조금 앞에서 언급한 각 순수정체의 장점들을 통해 즉 군주제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군주의 대승적 사랑으로, 귀족제에서는 지혜를 통해, 그리고 민주제에서는 자유를 통해 res publica의 표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19) Cicero, 앞의 책 (1997), p. 153.

20) “공화국에서 행정관들이 충분한 권력을, 지도자들의 평의회가 충분한 권위를 그리고 인민들이 충분한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면 공화국의 안정은 유지될 수 없다.” De re publica 2, 33, 57; Cicero, 앞의 책 (1997), p. 227.

21) Suerbaum, Werner, *Vom Antiken zum frühmittelalterlichen Staatsbegriff*(Münster: Aschendorffsche Verlagsbuchhandlung, 1977), p. 13.

이것들을 다 갖춘 혼합정이 최선의 정체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화주의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체 혹은 지배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 누가 *res publica*를 이룰 것인가라는 ‘주체’의 문제보다는, *res publica* 그 자체가 담보되는가가 문제이다. 인민의 이익을 그리고 공동의 정의와 법을 담보해낼 수 있다면 군주정도 귀족정도, 나아가 민주정도 공화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체들의 좋은 요소들을 혼합한 혼합정이 존재하기에 그것이 최상의 정체이고, 그것이 로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와 ‘공화’의 문제의식은 뚜렷이 구별된다. 민주정은 그 개념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배(*kratia*)를 함축하고 있다. 반면 공화정은 *kratia*가 없는 *res publica*이다. 사회의 한 층에 의한 권력독점과 지배를 지양하기 위해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은 로마 공화정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하층시민이 민회를 지배하면서 국정을 독점했을 때 아테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론은 하층시민과 상층시민을 혼합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민주정의 과도화의 경향을 희석시키기 위해 상층시민을 충원하여 민주체에 과두제적 요소를 첨가시키는 것이 그의 혼합정의 핵심 문제였다. 동등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민주정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과두제적 요소를 첨가하여 급진화를 제어하는 온건민주정이 바로 그 목적인 것이다. 반면 로마의 공화주의는 달랐다. 폴리비오스는 로마가 거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힘의 관점에서 로마 공화정을 분석하면서 힘을 응집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체로 혼합정을 파악하였고, 키케로는 힘보다는 정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로마 공화정을 군주제, 귀족제 그리고 민주제의 장점을 결합시킨 제4의 좋은 정체로, 즉 혼합정으로 파악하였다. 공화정은 한사람이 지배하는 군주제도, 소수가 지배하는 귀족제도, 그렇다고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제도 아닌, 어느 한 요소의 독점적 ‘지배’가 없는 체제였던 것이다. 폴리비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의 정체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앞서 언급했던 바, 정체를 통제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행정 전체 내에서 그 요소들이 각기 갖는 권력 분담을 평등과 균형을 철저히 고려하여 규제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로

마인들조차도 그 정체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귀족정인지, 아니면 민주정인지 또는 군주정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정관들이 지닌 힘만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군주정이나 왕정으로 간주하려 하게 되나 원로원이 지닌 힘만을 한정하여 보면 귀족정으로 간주하게 된다. 끝으로 평민이 지니고 있는 힘만을 관찰해 보면 그것은 다시 명백한 민주정의 경우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Polybios, 6, 11).²²⁾

공화정은 어느 한 계층 혹은 어느 한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체제가 아닌 공존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제인 것이다. 이런 체제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 권위도 가지게 되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되어도 그 체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권력은 인민에게 있어야 하지만, 권위는 원로원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De legibus, 3, 10, 28).²³⁾

민주정의 핵심인 ‘민주’와 공화정의 핵심인 ‘공화’의 차이는 자유를 어떻게 보는가에서도 드러난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우선적이었던 반면, 로마 공화정에서는 개인의 보호가 먼저였다.²⁴⁾ 아테네에서는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이후 폴리스에 통합된 단일한 시민체가 형성되었고, 추첨과 짧은 공직기간을 통해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로마에서는 귀족과 인민간의 명확한 구분 속에서 그들의 정치공간도 분리되었다. 이런 구분 속에서 귀족에게는 자유가 정치참여의 자유였고, 인민들에게는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였다. 이렇게 로마에서는 평등하고 동질적인 시민층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로마는 산술적 평등보다는 기하학적 평등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²⁵⁾ 앞에서 언급했던 인민과 귀족의 평등은

22) Polybios, 앞의 책 (1991), 482쪽.

23) 허승일, 앞의 책(1995), 306에서 재인용.

24) 고대 아테네와 로마의 자유 관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Meier, Christian “Der griechische und der römische Bürger.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im Ensemble gesellschaftlicher Bedingungen,” Ernst Günther Schmidt(hrsg), *Griechenland und Rom*(Tbilissi: Univ. Verlag, 1996); Raaflaub, Kurt A., “Freiheit in Athen und Rom: Ein Beispiel divergierender politischer Begriffsentwicklung in der Antike,” *Historische Zeitschrift*. Bd. 238(1984) 참조

25) 허승일, 앞의 책 (1995), 298-299쪽 참조

능력과 자질을 무시한 획일적, 산술적 평등이라는 언급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월성을 높이 평가하는 로마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독점화의 경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최종심급으로 민회라는 확실한 권력체가 있었다면, 로마는 그렇지 않았다.²⁶⁾ 행정관들은 복수로 선출되었으며, 그들은 서로 비토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횡은 불가능하였고, 협력이 불가피 하였다. 여기에 더해 짧은 임기는 과도한 권력장악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공간인 귀족들의 원로원과 인민들의 민회가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인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호민관은 신성불가침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관들의 조처와 원로원의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인민이 전권을 쥐게 됨에 따라 평등의 요소가 결정적이게 되고, 자유를 규정하여 주로 정치참여의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반면 로마 공화정에서는 귀족과 인민이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유개념이 생기게 된다. 귀족의 입장에서는 독재자나 왕이 나타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자유개념을 옹호하게 되고, 인민들에게는 권력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자의로부터의 보호라는 자유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로부터의 보호는 법치의 전통을 낳게 되었다. 민주정은 인민이라는 단일성 속에서 참여의 자유를 통해 지배를 행사했던 것이고, 공화정은 귀족과 인민의 차이를 인정하고—차별이 아니라 구별로서—, 그들의 공간을 마련하고, 나아가 상이한 제도를 통한 기능의 구별과 이해대변을 피하여 공존을 유도했던 것이다. 그 공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제는 공동의 이익이었다. 누가 지배하는가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들 공동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의 문제를 사고해야 했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의 문제는 바로 서로 다른 계층의 복합체인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었던 것이다.

26) Finer, S. E., *The History of Government From the Earliest Ti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Vol. 1, p. 396 참조.

III. 공화에서 민주공화로: 근세 초 르네상스기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민주공화주의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민주공화주의의 배경은 현실에 존재하였던 도시국가와 그들의 자기이해를 가능케 했던 고전문헌의 존재였다. 황제권과 교황권의 약화를 틈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실질적인 자율권을 획득하였고, 경제성장 등으로 성장한 시민층은 이러한 도시국가의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민층은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고대 로마 공화정에 대해 저술한 책과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의존했다.

우선 이들은 지리적 연속성에 의해 자신들을 로마전통과 연결시켰다. 따라서 그들의 국가를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명칭 했으며, 로마의 모범 속에서 해석하고 구성하려 하였다. 여기에 중세후기에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정체론과 민주주의론에 대한 관념을 제공해 주었다.²⁷⁾ 이 과정에서 *politia*를 *res publica*로 번역하게 된다. 고대 로마에서 *res publica*는 정치공동체가 담보해야만 하는 하나의 전제로서 좋은 정치와 공동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지배체 혹은 정부제도 등의 의미를 담은 *politia*의 개념을 대신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된 것이다. 키케로에게서 *res publica*의 개념 하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좋은 정치제도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그리고 가장 좋은 혼합정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 폭군정과 과두정, 중우정이 있었다면 이제 르네상스에서는 시민들의 자치체였던 도시국가가 군주정과 폭군정에 대비되는 시민자치정부로서 *res publica*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제 *res publica/republica*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정치공동체 질서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자치체로서 군주정 혹은 폭군정에 대립되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

피렌체의 정치가였던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Il Principe*) 첫 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27) 이하의 논의는 Mager, Wolfgang, *Zur Entstehung des modernen Staatsbegriffs* (Darmstadt: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1968) 참조.

역사상 오늘날까지 인간을 지배해 온 국가나 통치체는 모두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이었다.²⁸⁾

6가지 정체 대신에 공화국(republica)과 군주국(principato)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주저 『로마사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이하 『논고』) 1권 2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를 혼합정체로 설명하기 위해 폴리비오스의 논의를 빌려온다. 3가지의 좋은 정체—군주정(Principato), 귀족정(Ottimati), 민주정(Popolare)—와 그것의 타락형태—참주정(Tirannico), 과두정(stato di pochi), 무정부상태(licenzioso)—로 이어지는 정체의 순환과 그 순수정체들의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혼합정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republica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왕정에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공화국이고, 다른 하나는 통치 혹은 지배체로서의 국가이다. 그 예들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의 목적은 공화국(republica)이 아니라 왕국(regno)을 수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자유로워졌을 때, 그 도시는 자유를 위해 체정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결여하고 있었다...그리고 그 왕들은 내가 논의한 원인과 경위로 인해 왕위를 잃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낸 자들은 왕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즉시 두 명의 집정관을 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로부터 왕의 칭호를 박탈했지만, 왕의 권력에 해당하는 제도는 유지했다. 그 결과 이 국가(republica)에 집정관과 원로원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세 요소 가운데 두 요소(due qualità), 곧 군주정과 귀족정의 혼합이 형성되었다(Discorsi I, 2).²⁹⁾

republica는 지배체제를 갖춘 정치공동체의 질서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면서 동시에 좁은 의미로 군주정에 대비되는 시민들의 자치체인 도시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게 된다.³⁰⁾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에게 이 후자의

28) “Tutti gli stati, tutti e’ domini che hanno avuto e hanno imperio sopra gli uomini, sono stati e sono o repubbliche o principati.” Machiavelli(저)/강정인(역), 『군주론』(까치출판사, 1994), 11쪽.

29) Machiavelli(저)/강정인·안선재(역), 『로마사 논고』(한길사, 2003), 83 쪽

republica, 즉 공화국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귀족과 인민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공동체이다. 그들의 관계에 따라 군주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를 유지하는 공화국 혹은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 한다.³¹⁾ 마키아벨리는 정치공동체를 파악함에 있어 그 구성요소로서 정치세력들의 관계와 그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요소로서 제도들을 파악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화국(republica)은 일인 一인 지배체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집단 지배체제인데, 그 시민들은 서로 다른 귀족과 인민층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들 간의 세력관계 속에서 귀족정적 요소가 강한 공화국 혹은 민주적 요소가 강한 공화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립이 격화되어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배제하고자 한 사람을 옹립하여 승리했을 때는 군주정이 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³²⁾

이러한 공화국의 올바른 구성형태 혹은 권력형태를 마키아벨리는 혼합정 특히 인민 중심의 혼합정에서 찾는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정은 아니었다 명확히 인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민주정은 아닌 그것은 민주공화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인민중심의 공화정에 대한 옹호를 다음에서는 군주정, 민주정 그리고 귀족적 공화정 각각과 민주공화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³³⁾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일인지배체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군주정이고, 다른 하나는 폭군정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인지배자가 법률에 따

30) 김기봉 교수도 그의 논문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서양사론』, 제82권(2004), 17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31) “모든 도시에는 인민과 귀족의 두 계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인민은 귀족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귀족은 인민을 지배하고 억압하고자 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도시에 존재하는 상이한 이 두 기질로부터 세 가지 가능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곧 군주정(principato), 공화정(libertà) 그리고 무정부상태(licenzia)가 그것이다.” Il Principe IX; Machiavelli, 앞의 책(1994), 67~68쪽.

32) 이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는 정치공동체 내의 지배형태 혹은 정권형태를 가리키는 하부 용어로 governo를 사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그들이 탐욕, 야심, 여성들의 겁탈에 탐닉함으로써 최선자들(最善者)에 의한 통치(governo d'Ottimati)는 소수에 의한 통치(governo di pochi)로 전락하게 되었다.” Discorsi, I, 2; Machiavelli, 앞의 책(2003), 80쪽.

33) 광범위한 인민들을 정치에 충원하여 정치공동체의 힘과 유연성을 강화시키려고 한 마키아벨리의 국가전략에 대해서는 김경희, 「마키아벨리의 국가전략: ‘저변이 넓은 정체’(governo largo)에 기반한 힘과 유연성의 전략」, 『정치사상연구』, 제11집 제1호(2005), 133~152쪽 참고.

라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폭군정은 절대권력을 가진 참주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체제이다.³⁴⁾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정당하지 못한 정치를 피기에 주로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 군주정은 법률에 따라 군주가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이다. 로물루스의 행위를 설명하는 곳에서 드러나듯 훌륭한 군주는 자신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악처럼 보이는 불가피한 일도 행해야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보다는 법률 및 다른 제도들을 통해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자이다.³⁵⁾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세습보다는 선출에 의한 군주정이 더 좋다고 보았다. 세습은 능력이나 지혜 있는 군주의 재등장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주정을 타락시키기 때문이다.³⁶⁾ 이러한 질서정연한 법과 기율은 또한 당시의 프랑스 왕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19장에서 칭송한 고등법원을 『논고』에서도 언급한다.

고등법원, 특히 파리 고등법원이 이러한 법과 기율을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 법과 기율은 고등법원이 왕국의 군주를 기소할 때 그리고 왕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때마다 매번 갱신된다(Discorsi III, 1).³⁷⁾

34) “만약 강력한 참주가 우연히 출현하여 용기와 무력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에는 이익이 되지 않고 오로지 참주 자신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이런 참주는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강력하고 훌륭한 시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어떤 영예도 베풀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참주는 자신이 정복한 도시를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에 복속시키거나 속국으로 만들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도시를 강력하게 만드는 일은 참주에게 이롭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국가를 분열시켜 각각의 도시나 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떠받들게 만드는 일이 참주에게 더 이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 전체가 아니라 오직 참주만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정복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뿐이다.” Discorsi II, 2; Machiavelli, 앞의 책 (2003), 273쪽.

35) “로물루스는 자기 동생과 협력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용서받을 만한 인물에 속했다. 그가 한 일이 그 자신의 야심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행해진 일이었다는 점은, 그가 즉각적으로 원로원을 창설한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그 후 그는 원로원과 협의하였고, 원로원의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로물루스가 자신을 위해 남겨 놓은 권한을 잘 관찰한 사람은, 전시에 갖는 군대통수권과 원로원을 소집할 권한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에게 남겨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Discorsi I, 9; Machiavelli, 앞의 책(2003), 109쪽 이외에도 논고 1권 10장 참조.

36) 이에 대해서는 『논고』 2장, 앞의 책, 79쪽, 10장, 앞의 책, 114쪽, 11장, 앞의 책, 119쪽 참조.

37) Machiavelli, 앞의 책(2003), 417 쪽

로물루스의 예나 프랑스의 고등법원(parlamento)의 기능을 논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마키아벨리에게 군주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참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 제약되고 타정치세력과 권력을 분점하는 제한적 군주제인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 군주제라 할지라도 군주제인 이상 최종 결정권이 군주에게 있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게 된다.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 법제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며, 훌륭한 군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은 그의 수명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은 한 가지 방식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 위기조절능력이 군주국에서는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급변하는 정세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공동체가 유연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시민들을 정치영역에 충원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을 군주국보다 우위에 놓는다.

군주국에 비교할 때, 공화국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시대적 조건의 다양성에 스스로를 훨씬 잘 적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군주국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하며 행운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여 그의 방식과 조화되지 않으면, 그는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마련이다 (Discorsi III, 9).³⁸⁾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화국은 어떤 공화국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인 귀족과 인민 중에서 인민에 강조를 둔 민주적 공화정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전자에 강조를 둔 공화정은 귀족제적 공화정이라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를 민주적 공화정의 역사적 형태로 보았고, 스파르타와 베네치아를 귀족적 공화정이라고 보았다. 우선 민주적 공화정은 민주정과는 달랐다. 민주정은 아테네에서 드러나듯, 오직 민중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였다. 민주정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민중정부(governo popolare) 만으로는 정치체제의 안정과 발전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아테네 민주제가 실패한 원인은 그것을 “군주제적 권력이나 귀족제적 권력과 잘 융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⁹⁾ 민주정에 대한 비판에

38) 위의 책, 464~465쪽.

서도 알 수 있듯이 마키아벨리는 순수정체가 아닌 혼합정의 성격을 지닌 공화정을 옹호한다. 그러나 공화정을 구성하는 귀족과 인민의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귀족제적 공화정은 인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귀족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다. 권력을 소수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베네치아인들처럼 전쟁에 인민을 동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파르타인들처럼 외래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거나 해야 한다.⁴⁰⁾ 다시 말해 자국군을 육성하지 않고 용병이나 원군에 의지해야 하거나, 인구의 증대를 억제하여 제한된 크기의 공동체에서 내적 견고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소수 귀족이 권력을 가지고, 인민들에게는 정치권력 대신에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다는 데에서 그 정당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공동체가 팽창의 필연 앞에서 무력(無力)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 정치공동체는 혼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타 국가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 놓여있다. 주변국과의 평화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기에 이해관계의 대립과 그로 인한 전쟁가능성은 국가간의 관계에 항존하는 요소인 것이다. 귀족제적 공화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비판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 스파르타나, 이탈리아 본토의 정치에 개입하면서 “자신들의 무력을 시험당하게 되자 단 한번의 전투에 모든 것을 잃은” 베네치아의 예를 통해 그것은 입증된다.⁴¹⁾ 확장의 필연에 대처할 수 있으면서 한 세력의 권력독점에서 나올 수 있는 국내정치의 혼란 및 부패의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민주 공화정뿐인 것이다.

인민에 중심을 둔 공화정은 인민을 지배자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민을 정치에 참여시켜 지배욕을 가진 귀족층을 제어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물이든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가장 적은 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

39) Discorsi I, 2; Machiavelli, 앞의 책 (2003), 82쪽. 또한 그는 논고1 권28 장에서 “아테네에서 훌륭한 귀족들에 가해진 온갖 폭력적 행위들은 아테네의 매 시대에 걸쳐 수행되었다고 말한다”(위의 책, 163쪽).

40) 위의 책, 95쪽.

41) 위의 책, 97쪽.

하고 싶기도 하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귀족과 귀족이 아닌 자들의 목적을 검토해보면, 전자에게는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갈망이 있고, 후자에게는 단지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다시 말해 귀족들보다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적기 때문에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평민이 자유를 보호하는 직책을 담당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들이 그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훨씬 잘 지킬 것이다.⁴²⁾

로마공화정에 대한 언급에서 호민관, 탄핵권 그리고 합법적인 고발권을 칭송한 것은 그것이 모두 평민과 원로원을 중재하고, 귀족들의 오만함을 제어하며, 인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법과 제도가 구비될 때에만 자유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정체는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고, 사적 루트가 아닌 공적 루트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직에 참여하여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이렇게 가난함이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명예에 오르는 데 방해요소가 되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에 상관없이 등용될 수 있을 때, 더 많은 시민들은 공동체에 참여하고, 사익보다는 공공선에 복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라는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로마는 민중에 중심을 둔 공화정이었고, 그것의 핵심은 자유였다. 그 자유정체는 로마의 광범위한 시민층을 공동체에 복무시킴으로써 힘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자유의 핵심은 누구에게도 지배권을 부여하지 않는 데 있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인민에 중심을 둔다는 말은 재산, 학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귀족이 인민보다 이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약자인 인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귀족의 권위를 모두 빼앗아 인민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다.⁴³⁾ 그것은 또 다른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루어 전일적 지배의 형태를 나타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공동체를 이루는 두 축인 귀족과 인민

42) 위의 책, 89쪽.

43) “(호민관이라는 관직이 창설된 후-필자) 로마가 왕과 귀족의 정부에서 인민의 정부로 전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왕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빼앗는 법도 없었고, 인민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귀족들로부터 권위를 전적으로 박탈하는 일도 없었다.” 위의 책, 83쪽.

간의 세력균형을 꾀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균형은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균형이 아니다. 평민과 부자 혹은 인민과 귀족은 배경도, 가지고 있는 자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 자유를 태동시킨 이들의 불화(disunione)를 공적 공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핵심관건이다. 법, 제도 등의 공적 공간이 미비하여 그 불화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귀결은 거리 위의 유혈투쟁과 외세의 개입요청 등으로 이어져 공화정은 무너지고, 권력독재의 시기가 열리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공적 공간을 제공했던 것은 바로 원로원과 평민들 간의 불화 속에서 호민관제를 만들어낸 로마의 민주 공화정이었다.

-
- 44) “우리는 로마에서도 참주정을 수립하려는 악폐가 다른 대부분의 도시와 동일한 원인, 곧 자유에 대한 인민의 지나친 욕망과 귀족들의 지나친 지배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관찰할 수 있다.” 위의 책, 204쪽.
- 45) 마키아벨리는 로마와 피렌체의 대비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로마에서는 인민들과 귀족사이의 대립이 말을 통해, 토론을 통해 다루어진 반면, 피렌체에서는 무기를 통해 다루어졌다. 로마에서의 반목은 법을 통해 종결되었고, 피렌체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의 추방과 죽음을 통해 종결되었다. 로마에서는 그것들이 군사적 역량(virtù militare)을 고양시켰고, 피렌체에서는 그것을 없애버렸다...로마 민중은 귀족들의 사회에서 가장 높은 명예에 동참하고자 하였다. 피렌체 민중은 귀족들을 배제한 채 혼자만의 지배권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리고 로마 인민들의 요구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것만큼 귀족에게 부여된 제한들도 수행하기 쉬운 것들이었다. 이들은 쉽게 그리고 무기를 들지 않고서 양보하였으며 몇몇 입장의 차이는 법을 통해 합의를 보았으며, 이렇게 하여 귀족들의 명예는 손상 받지 않았으며 민중은 만족할 수 있었다. 한편 피렌체 민중의 요구는 상처를 주는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것이었다. 따라서 귀족은 모든 힘을 다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피를 보았어야 했으며,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야만 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제정된 법들은 공공선(comune utilità)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승자에게만 유리하였다. 로마는 민중이 승리함과 더불어 점점 용감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민중에 속한 시민도 귀족과 함께 최고 관직에, 군대와 정복지의 명령권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귀족들에게 충만했던 것 같은 역량(virtù)으로 충만 하였으며, 이러한 역량의 증가와 함께 권력의 증가가 함께 하였다. 그러나 피렌체에서는 민중이 승리하게 되자 귀족들은 관직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그들이 그것을 얻으려면 행동과 신념 그리고 삶의 양식을 민중의 것과 같게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보여야만 했다. 여기서 귀족들이 민중이 되기 위해 실행한 가문 문장의 변화와 가문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귀족에게 있었던 군사적 역량과 정신의 고귀함이, 그것이 없었던 민중 속에서 되살아나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피렌체는 계속 낮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Machiavelli, Niccolò, *Opere*, a cura di Mario Bonfantini(Milano: Riccardo Ricciardi Editore, 1965), pp. 680~681.

IV. 결론

지금까지 고대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까지 이르는 서양 정치공동체들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고민을 민주와 공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공동체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체론(政體論)의 핵심이었고, 그것은 혼란과 몰락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빈자와 부자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아테네가 혼란에 빠지자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 등은 빈자를 보호하고 시민층을 공동체에 결합시키는 민주적인 개혁을 펼친다. 그러나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해상제국으로 발전하자, 시민권을 갖지 못했던 광범위한 하층민들이 수병으로 시민층에 편입되게 된다. 이들이 민회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민주화의 경향은 급진적으로 흐르게 된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얻는 이익으로 살았기에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해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민회를 조종하고, 아테네 정치를 움직여 결국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 데모스에 의한 지배로서의 민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두제적 요소를 혼합하여 그 과도화의 경향을 제어하려 한다. 혼합정의 이념이 싹트게 된 것이다.

폴리비오스는 이러한 혼합정론을 가지고 로마의 힘을 분석하려 하였다. 서로 다른 제도와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독점을 막아내고, 그것이 내부의 힘을 응집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속에 조화를 이루는 혼합정론은 키케로에 이어져 로마 공화정을 분석하는 핵심도구가 되었다. 전쟁에 패해서 끌려온 그리스인 폴리비오스에게 로마의 힘의 원천이 문제가 되었다면, 로마인 키케로에게는 자신의 공화정을 근거지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정체보다는 *res publica* 가 먼저였다. 다시 말해 후자를 담보하는 것은 전부 좋은 정치체제였고, 그것은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에서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다 갖춘 혼합정이 공동의 이익과 정의를 담보하기에 가장 좋은 정체였다. 누구의 지배가 아닌 공동의 것이 최우선으로 사고되었고, 그것은 ‘지배’(-*kratia*)에 대한 공화의 승리인 것이다.

한편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는 황제정 및 군주제와 대비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일인지배체제에 대비되는 의미로 공화정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대의 혼합정론이 결합되면서, 시민 특히 인민에 중심을 둔 공화주의 개

념이 태동하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피렌체의 혼란상을 겪으면서 귀족보다는 인민을 강조한다. 외세의 침입과 그것에 대처하지 못하는 조국의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인민을 정치에 충원할 수 있는 공화정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성찰들의 결론은 공동체는 다양한 층들에 의해 구성되기에 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획일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그들은 가진 것에서 차이가 있기에 귀족 혹은 부자와 인민 혹은 빈자라고 불리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각각의 공간, 즉, 제도를 공동체에 마련해야 한다. 그 속에서 그들은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화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차별은 누구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를 낳고, 지배는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권력의 독점은 공동체의 혼란과 몰락을 낳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견제와 균형은 산술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힘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속에서 정확한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공화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인민에 강조를 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민주공화주의는 바로 위에서 언급된 일련의 고민들 속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평등과 참여의 강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극단화로의 경향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공화주의의 역할이다.⁴⁶⁾ 한편 법치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는 갈등의 쌍방인 인민과 귀족을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귀족의 실질적 지배를 용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⁴⁷⁾ 이러한 과도정으로의 경향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공화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층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체제에 마련된 제도와 공간을 통해 그들을 공동체 속에 연계시키며, 나아가 어느 한 계층이 자의

46) 공화주의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Viroli, Maurizio(저)/김경희·김동규(역), 『공화주의』(인간사랑, 2006) 참조.

47) 공화주의의 모태로서 고대 로마 공화정은 실제로는 과도정이었다고 흔히 로마사학자들은 주장한다.

적 지배를 행할 수 있는 위험을 법치 속에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동체에의 연대감 등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⁴⁸⁾ 한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그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 덕목, 자질 다시 말해 시민의식(civic virtue)에 대한 문제의식은 민주공화주의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시민들이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민적 덕성의 핵심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⁴⁹⁾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배로의 경향, 다시 말해 과도한 참여와 배제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의적 지배로의 경향을 배제하고, 동등한 주권자—지배자이자 동시에 피지배자—로서 법치에 참여하는 자유를 시민들의 정치적 삶 속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민주공화주의의 이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다. 앞서 본 서구 역사의 경험은 ‘인민에 의한 통치’(by the people)가 ‘인민을 위한 통치’(for the people)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공화주의의 문제의식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통치’를 ‘인민이 아닌 이들에게만 맡길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며, 그 또한 서구의 경험이었다. 공화주의는 “인민에 의한 정치”와 “인민을 위한 정치” 사이에 존재한다. 문제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인데, 그것은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아내는 데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에, 그리고 민주와 공화의 관계에 정답은 없다. 현실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48) 민주주의의 모태인 아테네와 공화주의를 낳은 로마의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도출된 자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Raaflaub, *ibid.* 참조.

49) 비롤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화국은 ‘시민적 덕성’(civic virtue),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Viroli, 앞의 책 (2006), 69쪽.

참고문헌

- 김경희, 「마키아벨리의 국가전략: ‘저변이 넓은 정채(governo largo)에 기반한 힘과 유연성의 전략」 『정치사상연구』 제11집 제1호, 2005, 133~152쪽.
- 김경희,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 이소노미아(Isonomia)로 아테네 민주정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006, 5~25쪽.
- 김비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6권 제2호, 2003, 93~116쪽.
- 김기봉,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서양사론』 제82권, 2004, 5~39쪽.
- 송호근,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서울: 21세기 북스, 2005.
- 양병우, 『아테네 민주정치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76.
- 이수석, 「혼합정체의 정치사상사적 연구: 고대 혼합정체론의 전개와 부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정원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하며」 『철학』 제1집 여름 2002, 171~196쪽.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허승일, 『로마 공화정 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5.
- Aristoteles/나종일(역), 『정치학』. 서울: 삼성출판사, 1982.
- Aristoteles/최자영(역), 「아테네 정치제도사」. 아리스토텔레스·크세노폰(외저)/최자영·최혜영(역), 『고대 그리스정치사 사료』.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2002, 49~114쪽.
- Finley, M. I.(역음)/이용찬·김쾌상(역), 『그리스의 역사가들』. 서울: 대원사, 1991.
- Forrest, W. G./김봉철(역),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 Machiavelli, Niccolò/강정인(역), 『군주론』. 서울: 까치출판사, 1994.
- Machiavelli, Niccolò/강정인·안선재(역), 『로마사 논고』. 서울: 한길사, 2003.
- Martin, Thomas R./이종인(역), 『고대 그리스의 역사』. 서울: 가람기획, 2003.
- Viroli, Maurizio/김경희·김동규(역), 『공화주의』. 서울: 인간사랑, 2006.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Chicago Uni. Press, 1973.
- Finer, S. E., *The History of Government From the Earliest Times*, Vol. 1. New York: Oxford Universtiy Press, 1997.
- Cicero, *De re publica/Vom Gemeinwesen*. Übersetzt und herg. von Karl Büchner,

- Stuttgart: Reclam, 1997.
- Machiavelli, Niccolò *Opere, a cura di Mario Bonfantini*. Milano: Riccardo Ricciardi Editore. 1965.
- Mager, Wolfgang, *Zur Entstehung des modernen Staatsbegriffs*. Darmstadt: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1968.
- Meier, Christian, “Der griechische und der römische Bürger.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im Ensemble gesellschaftlicher Bedingungen.” Ernst Günther Schmidt(hrsg), *Griechenland und Rom*. Tbilissi: Univ. Verlag. 1996. pp. 41~66.
- Meyer, Ernst, “Vom griechischen und römischen Staatsgedanken.” Richard Klein(hrsg), *Das Staatsgedanken der Römer*. Darmstadt: WBG, 1966, pp. 65~86.
- Raaflaub, Kurt A., “Freiheit in Athen und Rom: Ein Beispiel divergierender politischer Begriffsentwicklung in der Antike.” *Historische Zeitschrift*. Bd. 238. 1984, pp. 529~567.
- Raaflaub, Kurt A., “Die Anfänge des politischen Denkens bei den Griechen., I. Fetscher&H. Minkler(hrsg), *Pipers Handbuch der politischen Ideen*. Bd. 1. München: Piper, 1988, pp. 189~271.
- Suerbaum, Werner, *Vom Antiken zum frühmittelalterlichen Staatsbegriff*. Münster: Aschendorffsche Verlagsbuchhandlung, 1977.

국문 요약

이 글은 고대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까지 이르는 서양 정치공동체들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고민을 민주와 공화의 관점에서 살펴 본 논문이다.

아테네가 제국화되고 하층민들의 지배에 의한 과격한 민주주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실정(失政)으로 인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패하게 되자 많은 아테네 지식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우중의 지배로 비판하였고, 부자들과 권력을 분점할 것을 주장한다. 권력의 독점 속에서 나오는 극단화로의 경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혼합정의 주장은 이때 역사상 처음 나타나게 된다. 균형과 조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극단화 경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을 공화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로마의 공화정은 왕정의 폐지 후에 귀족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인민들과 조화를 이루는 정체를 마련하게 된

다. 집정관, 원로원, 민회 등의 각 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민의 직접 참여 혹은 지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도 혹은 대표들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였다. 다시 말해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이었다. 이러한 세력균형과 권력분점에 대한 관점은 귀족과 인민사이의 끝없는 분란을 겪었던 근세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도시 공화국에서 살았던 마키아벨리에게서 나타나며, 인민에 중심을 두어 공화정을 구성하고자 하는 민주공화주의 이론을 태동시키게 된다.

요약하자면 공화민주주의는 공화 즉, 공동체 구성세력의 권력분점에 강조를 둔 민주제를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민주공화주의는 인민에 중심을 둔 공화주의로서 인민 중심의 혼합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민주주의와 민주공화주의는 이렇게 권력독점을 지양하며, 권력분점과 혼합정을 주장하는 등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 경험과 귀족과 인민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민주가 너무 강해져 지배와 독점의 경향이 나타날 때는 공화로 균형을 잡으려 하고, 권력을 귀족층 및 엘리트들이 과점 혹은 독점하려는 경향 속에서는 민주를 강조하여 공화의 무게 중심을 잡으려는—정치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중용의 역사적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투고일 : 2007. 1. 25.

● 심사완료일 : 2007. 2. 27.

● 주제어(keyword) : 아테네 민주주의 (Athenian Democracy), 로마 공화정 (Roman Republic), 혼합정 (Mixed Constitution),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 민주공화주의 (Democratic Republicanism)